

與 대선 레이스 '경선 연기론' 변수 재부상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내년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본경선 막이 오른 가운데 12일 경선 연기론이 다시 여론 대선 레이스의 변수로 재부상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른 강력한 방역 필요성과 흥행 부진 우려를 계기로 경선 연기 주장이 다시 힘을 얻고 있어서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민주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선 연기론과 관련해 윤호중 원내대표에게 "2주 간의 수도권 4단계 거리두기 성과를 보고 경선 일정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고육지책을 제안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4차 대유행이 더 심화될지도 모르는데 4단계 거리두기

가 효과를 거둔다면 현행대로 가는 방향이 거리두기 효과가 전혀 없다면 (일정 연기론) 논의는 해볼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본경선의 메인 이벤트라 할 수 있는 지역 순회 경선은 다음달 7일 대전·충남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일단 현행 일정을 유지하되 2주 간의 수도권 4단계 거리두기 성과에 따른 확진자 감소세 등을 살펴본 뒤에 필요하다면 일정 연기를 논의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는 송 대표가 경선 연기 불가 입장을 고수해 온 것에서 미묘한 입장 변화가 생긴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송 대표가 경선 연기 논의의 여지를

송영길 "4단계 거리두기 성과 보고 일정 재논의" 추미애·박용진도 선화...이재명 "당 정하면 따라"

남겨놓는 쪽으로 선화한 것은 초유의 거리두기 4단계를 불러올 정도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지난 세 차례 대유행과는 차이를 달리하는 데다 당내 대선 주자들의 압박 강도도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 6월 경선 연기 1차전 때는 백신 접종이 가속화되며 코로나19 상황은 대선 경선에 큰 변수로 고려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당헌·당규 준수라는 명분을 거스르기 쉽지 않았지만 이전보다 훨씬 위협적인 양상으로 4차 대유행에 불이 붙으면서 경선 연기 주장을 마냥 외면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비(非)이재명계 민주당 대선주자들도 한목소리로 본경선 일정 연기를 주장하고 나섰다. 전날 "이런 시기에 선거인단 모집 등 행위를 하는 것이 국민과 당원을 위해 빠뜨리는 것 아닌가 심히 걱정된다"며 경선 연기론을 주장한 이낙연 전 대표는 이날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켜드리려면 방역 지침대로 거의 전면 비대면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게 가능한지, 국민의 관심을 모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경선 연기 논란 때는 현행 일정 유지를 주장하며 이 지사 쪽에 힘을 실어줬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박용진 의원도 경선 연기 필요로 입장을 선화했다.

추 전 장관은 전날 "2인 이상 집합 금지가 된 상황에서 민심을 제대로 경청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없지 않다"며 연기 쪽에 무게를 뒀으며 박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 방역당국의 지침은 국민 2명 이상 모이지 말라는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 당이 (경선) 행사를 강행하는 것을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실지가 일단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경선 연기를 반대해 왔던 이 지사도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경선 연기는 안된다"는 입장이나는 질문에 "당이 정하면 따라야 한다"고 답해 기류 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다만 이는 코로나19 확산세와 경쟁 주자들의 집중 견제를 감안해 원론적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게 가능한지, 국민의 관심을 모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취재본부김윤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수도권 특별방역점검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문 대통령, 수도권 '4단계' 조치에 "국민께 송구...짧고 굵게 끝낼 것"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이날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대해 "또다시 국민들께, 조금 더 참고 견뎌내고 당부드리게 되어 대단히 송구한 마음 금할 수 없다"고 고개를 숙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코로나19 대응 수도권 특별방역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여기서 막아내지 못한다면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다. 수도권 지자체들과 협력하여 확산세를 반드시 조기에 끝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번 4단계 시행과 관련해 "붕쇄 없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강도의 조치로서, 방역에 대한 긴장을 최고로 높여 '짧고 굵게', 상황을 조기에 타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상의 불편과 경제적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일이지만 방역 상황을 조속히 안정시키고, 더 큰 피해와 손실을 막기 위한 비상 처방"이라며 "짧고 굵게 끝낼 수만 있다면, 일상의 부끄러움을 앞당기고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희망을 가지기 시작했다가 다시 막막해진 중소기업들과 자영업자들을 생각하면 무척 마음이 무겁고 가슴이 아프다"며 "이분들을 위해서라도 '짧고 굵게' 끝내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영업 제한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는 손실보상법과 추경 예산을 활용하여 최대한 보상함으로써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취재본부김윤호 기자

윤석열 29.9% 이재명 26.9%...이낙연 18.1% 약진

윤석열 1.5%p↓ 이재명 3.4%p↓...이낙연만 홀로 5.9%p↑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재명 경기지사의 지지율이 하락한 반면 3위 주자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약진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12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9~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4명을 상대로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윤 전 총장 29.9%, 이 지사 26.9%, 이 전 대표 18.1%로 조사됐다.

이어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4.5%,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4.2%,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 4.1%, 최재형 전 감사원장 2.5%,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2.1%, 정세균 전 국무총리 1.7%, 심상정 정의당 의원 0.9% 등의 순이었다.

지난주와 비교해 윤 전 총장과 이 지사가 각각 1.5%포인트, 3.4%포인트씩 떨어졌지만 하락한 가운데 이

전 대표가 5.9%포인트 올라 대폭 상승한 점이 눈에 띈다.

세부적으로 윤 전 총장은 60세 이상(48.0%), 대구·경북(40.1%), 가정주부(40.4%), 보수성향층(48.7%),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 평가층(55.8%), 국민의힘 지지층(68.6%)에서 지지율이 가장 높았다.

이 지사는 40대(40.7%), 광주·전라(36.6%), 인천·경기(32.6%), 블루칼라층(31.8%)·화이트칼라층(29.9%), 진보성향층(42.1%),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층(46.8%), 민주당 지지층(45.4%)에서 지지율이 가장 높았다.

이 전 대표는 20대(22.7%)와 학

생(21.7%)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특히 전주대비 여성(18.1%→26.0%, 7.9%포인트↑), 30대(17.0%→25.6%, 8.6%포인트↑), 광주·전라(22.9%→35.7%, 12.8%포인트↑), 대전·세종·충청(12.1%→23.8%, 11.7%포인트↑), 자영업층(6.2%→20.0%, 13.8%포인트↑)·화이트칼라층(13.8%→24.3%, 10.5%포인트↑),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층(25.7%→36.0%, 10.3%포인트↑), 민주당 지지층(28.3%→38.4%, 10.1%포인트↑)에서 크게 상승했다.

뉴스스

野 "이진석·기모란 즉각 경질해야"

"4차 대유행 책임 물어야"

국민의힘은 12일 문재인 정부에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책임을 물으며 이진석 국정상황실장과 기모란 청와대 방역기획관 등의 경질을 촉구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 방역에 실패한 책임자 이진석과 기모란은 즉각 경질돼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방역기획관 자리를 새로 만들더니, 야당과 전문가의

반대에도 기모란 기획관을 임명했다"며 "기 기획관은 '백신 구입을 서두를 필요 없다'는 등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발언을 일삼은 사람"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방역 실패가 거듭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에 대해서도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 공식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 받아야 할 사람"이라며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하다는 이유로 자리를 유지했다. 이번만큼은 방역 실패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취재본부김윤호 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直通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